

환경후보, 환경정당의 선택

신 창 현 환경정책 연구소 소장

13대 국회의 환경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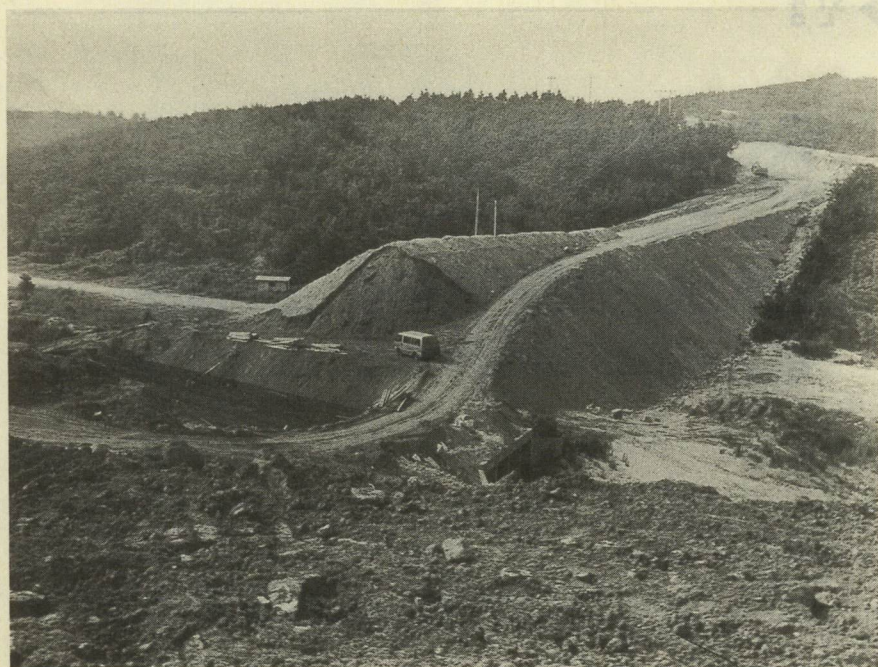
90년 10월에 환경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직면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 환경오염을 지적한 응답자가 전체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와 물·쓰레기·소음등 생활환경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77.2%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치안 47.3%, 환경오염 방지 41.5%, 교통·주택문제의 해결 41.2%의 순서로 응답할 정도로 환경오염은 이제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것은 다른 분야의 공신력있는 기관들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향후 10년 동안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환경문제를 맨 처음 꼽거나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로 물가에 이어 환경문제가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문제가 정말 이렇게 심각한 것인가? 혹시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환경처에 접수된 30인 이상의 집단민원 통계를 보면 이러한 조사 결과가 과장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탁한 공기·공장 폐수·쓰레기·소음 공해 등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88년에 1백68건, 89년에 1백54건, 90년에 1백44건, 91년에 1백86건 등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환경오염의 예방 또는 피해구제에 관한 집단민원이 환경처에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3대 국회 기간중에 발생한 환경관련 주요사건들을 살펴보면



• 설악산 울산바위 아래에 콘도미니엄단지를 건설하면서 산허리를 깎고, 베고, 파헤치는 현장

우리사회의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표 참조>

민자당과 민주당의 환경활동 평가

88년의 6건에 비해 91년은 12건으로써 지난 4년동안 환경관련 주요사건의 발생이 두 배로 늘어날 만큼 심각해진 환경문제에 대해 13대 국회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여당인 민자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이점에서 아주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개회 중의 국회활동과 폐회 중의 정당활동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관련 주요사건에 대한 현지조사 활동실적이 거의 없는 민자당(90년 3당합당

이전 민정당)과는 반대로 민주당(야당통합 이전 신민당과 평민당)은 90년에 팔당호 골재채취 현장조사(6. 22), 설악산 자연파괴 현장조사(7. 6), 인천 영종도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어민피해 현장 조사(8. 14), 군산 TDI 공장문제 현지조사(8. 31),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반대 현장조사(11.9) 그리고 91년에는 낙동강 폐놀오염사건 현지조사(3. 26), 인천 소래포구 매립반대 현장조사(5. 29), 재벌들의 그린벨트 훼손 별장 현지조사(10. 4), 용인군 골프장 주변 수재피해 현장조사(10. 4),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반대 현지조사(10. 28) 등 환경문제가 있는 곳은 전국 어디든지 찾아가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둘째, 공청회와 토론회등을 통한 환경정

책의 개발도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민자당과는 대조적으로 공해피해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정책토론회(90. 4. 17), 90년대 환경정책에 대한 야당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한국환경기자클럽이 주최한 김대중 총재 초청토론회(90. 12. 2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공청회(91. 1. 17)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세제, 대 정부질의회와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의 국회활동에서도 민자당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한 서면 질문이나 형식적인 질문으로 시간만 보내면서 정부측의 답변은 거의 듣지 않은 때가 더 많은 정도로 환경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고 오히려 재벌기업들의 공해배출 행위를 간접적으로 옹호하는 사례마저 있었다.

민자당은 또 90년의 수도물 THM 검출사건이나 91년의 낙동강 폐놀오염사건 등 환경관련 주요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각종 대책은 수 없이 발표해 놓고 예산편성 때는 환경예산부터 삭감하는 정부의 이중성을 비판하기 보다 들러리 역할에 만족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지조사 결과와 주민여

론을 토대로 환경처장관·경제기획원장관·국무총리 등에게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책임과 대책을 끈질기게 추궁하는 한편, 상임위원회 정책질의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혀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예산투쟁도 성실하게 전개하였다.

네제, 환경문제에 관한 13대 국회 입법활동에서, 민자당은 환경관계 법안을 발의한 실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제주도개발특별법과 같은 환경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데 반해 민주당은 상수원 수질보호 특별조치법안, 환경보전 기본법안,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부담법안, 환경오염 피해배상법안과 환경청을 환경부로 승격시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안과 자연환경 보전법안을 발의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 밖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활동으로서, 민자당은 환경의 날 기념 쓰레기줍기, 쓰레기 안버리기 등 전시행정용 환경보전 행사에 치중하면서 민간단체가 할

〈표〉 13대 국회 기간중 환경관련 주요사건

•기간: 1988~1991년

88년도 환경관련 주요사건 발생 현황(6건)

- 서울 상봉동 연탄공장 먼지로 인한 박길래 주부 진폐증 피해사건
- 영일만 해상의 유조선 침몰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사건
- 현대그룹의 서해안 간척사업으로 인한 충남 서산군 어민들의 피해보상 요구사건
- 15세 소년 문송면군이 작업장에서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 전남 장성군 주민들의 고려시멘트 공장 이전, 피해보상 요구사건
- 전남 여천공단 공해업체 이전과 광암만오염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시위와 농성사건

환경문제 해결을 놓고 민주·민자 양당의 점수를 매긴다면 어떻게 나올까. 민자당은 40점을 민주당은 80점을 줄 수 있다고 환경전문가들은 말한다.

일을 대신해 왔다면 민주당은 90년 8월에 녹색의 전화(대표 박 영숙의원)를 개설하여 환경오염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활동을 벌이거나 민간 환경단체들과 공동으로 환경관련 주요사건의 현지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자당에 비해 훨씬 더 성실한 자세로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였다. 이때문에 민주당의 박영숙의원은 한국환경기자클럽이 주는 '올해의 환경인'상을 첫번째로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의 노력을 점수로 평가해본다면 민자당은 40점 정도로 점수를 매기는 것조차 부끄러울 만큼 13대 국회에서는 환경관련 의정활동이 부진했다. 반면에 민주당의 경우 야당이기에 때문에 정보자료의 부족은 물론 전문인력과 예산등에서 여당에 비해 지극히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활발한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면서 대안제시에 필요한 환경정책의 개발과 입법활동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80점을 주어도 모자랄 듯하다.

14대 국회의 환경문제

14대 국회에서는 어떠한 환경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물과 공기의 오염문제, 소음공해, 쓰레기와 골프장문제, 핵폐기물 처분장과 핵발전소 건설문제 등등 13대 국회에서 미해결로 넘어온 것들은 14대 국회가 계속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새롭게 추가될 중요한 환경문제로는 부산 인공섬 건설과 영종도 신공항 건설로 인한 해양오염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문제, 경부고속전철 건설로 인한 환경오염 중에서 특히 소음·진동피해문제, 제주도를 하와이형 관광지로 개발하는

89년도 환경관련 주요사건 발생현황(8건)

- 핵발전소 근로자 김익성씨 부인이 두차례나 무뇌아를 사산한 사건
- 온산·울산공단내의 듀폰 이산화티타늄공장 건설 반대사건
- 경기도 화성군 매항리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미군기지 집단농성사건
- 김포공항 주민들의 소음피해로 인한 피해보상과 집단이주대책 요구사건
- 정수장의 수돗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어 전국민이 깜짝 놀란 수질오염사건
- 전남 영광군 주민들의 핵발전소 3·4호기 건설 반대사건
- 고리 핵발전소 주변 아산의 핵쓰레기 불법매립으로 인한 주민들의 집단시위와 방사능 오염 측정사건
- 유해 산업쓰레기를 2백억원 어치나 외국에서 무더기로 수입한 사건

총선 국면에서 민간 환경운동에 부여된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환경 후보'를 뽑는 일, 더 나아가 정당별 공개질의서를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정당후보를 선택하는 일이다.

선출할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눈 앞에 다가온 것이다. 민간 환경단체 회원은 물론 환경 문제에 관심있는 유권자들도 4년만에 한번 있는 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환경후보가 많이 선출되면 이들이 14대 국회에서 대 정부 질의나 국정감사 또는 예산·결산 심의와 입법활동 등을 통해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것은 환경문제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건설위·내무위·상공위·경과위 등 경제개발 관련 상임위원회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분과 위원이라 할지라도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제정책과 환경정책을 동전의 앞뒷면처럼 다룬다면 우리나라 환경 문제의 해결은 훨씬 더 앞당겨질 수 있지만 반대로 환경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거나 있어도 별로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14대 국회의 환경정책은 오히려 뒤로 후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자당과 민주당이 공천한 14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보면 환경문제를 연구한 학자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환경전문가와 같이 처음부터 환경후보의 조건을 갖춘 후보들은 예상대로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후보자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은

91년도 환경관련 주요사건 발생현황(12건)

- 두산전자 폐놀유출 사고로 인한 대구시민 수돗물 오염피해사건
- 대구 염색공단의 폐수불법 방류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사건
- 인천 소래포구 매립으로 인한 어민피해 보상과 매립허가취소 요구사건
- 경기도 화성사업소 유독폐수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과 이전 요구사건
- 원진레이온 근로자들의 이황화탄소 중독 사망사건
- 용인군 골프장 건설현장 주변에서 산사태와 홍수피해로 25명의 주민이 사망한 사건
- 운영중인 골프장의 맹·고독성 농약사용과 건설중인 골프장의 산림 불법훼손사건
- 장병조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한 골프장 사업승인 특혜의혹사건
- 재벌기업들의 별장건설로 인한 그린벨트 무더기훼손 적발사건
- 48개 환경·주민단체가 골프 대중화 정책의 철회를 요구하며 관계법률등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서 제출사건
- 제주도개발 특별법의 제정에 항의하는 나라사랑 청년회원 분신사망사건
-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 선정을 위한 자원신청지역의 공개모집과 주민반대사건

과정에서 발생할 지하수의 고갈·오염과 자연생태계 파괴문제 등이 예상된다.

그리고 환경행정 또는 환경입법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문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행정절차법 제정문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총량규제 실시문제, 환경부승격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문제, 골프장 건설을 억제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문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환경처장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백지위임해버린 제주도 개발 특별법의 개정문제등이 있다.

그 밖에 92년 6월 브라질의 개발과 환경에 관한 유엔회의에 정부는 물론 민간환경단체들도 참가하는 문제, 오존층 파괴물질 규제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산가스 배출규제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약과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규제에 관한 바젤협약등 지구환경 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대처하는 문제도 14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

2백37명의 지역구의원과 62명의 전국구 의원을 새로 뽑는 14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환경·시민단체와 환경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덕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이에 비례해서 민간 환경운동의 역량도 많이 강화되었다.

환경후보 선출과 환경정당의 선택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의 속도에 비추어 정부와 기업 특히 정치권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문제는 선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국회에서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대변하고 환경문제 해결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환경후보를

90년도 환경관련 주요사건 발생현황(10건)

- 서울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의 팔당호 골재채취계획 반대사건
- 천국 정수장에서 발암물질 THM이 허용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수도물에 대한 국민불신이 더욱 심화된 사건
- 덕유산 국립공원내 스키장 건설로 인한 무주구천동 수질오염과 골프장건설 반대사건
- 91 세계 잼버리대회 행사준비와 대규모 콘도미니엄단지 건설로 인한 설악산 자연 생태계 파괴사건
- 인천항 유조선충돌,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해양오염 피해사건
- 서울시 정수장의 수도물에서 맹독성 농약 DDT와 발암물질 벤조피렌 등이 검출된 사건
- 부산시 해운대 반송동 주민들의 산업쓰레기 매립장 건설반대 도로점거 농성사건
- 경북 선산군 산동면 주민들의 골프장 건설반대 집단시위와 농성사건
- 군산 TDI공장 철거를 요구하는 10만 시민 서명운동과 국회 청원사건
- 충남 태안군 안면도 주민들의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반대사건



• 지난 1월 30일 각지역 환경단체들이 모여 14대 총선의 '환경후보' 선출에 대해 논의했다.

물론 기초지식도 전달하면서 14대 국회의 환경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후보를 선거기간 중에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더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환경후보 선출을 위한 설문조사방안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개발 특별법 개정문제를 놓고 환경후보로 당선된 의원은 독소조항의 개정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대다수인 경우 다수결 원칙에 따라 그 정당의 당론은 법개정 반대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보완하는 방법은 후보자 개인 뿐만 아니라 소속정당에 대해서도 14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관해 정당별로 명백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것이다.

이것은 정당이 먼저 선거공약을 제시하면 유권자가 그것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

라 유권자가 먼저 현안문제를 제시하고 정당이 이에 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다는 점에서 과거의 선거 공약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 그동안의 선거운동 과정을 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전·홍보하는 정책이나 공약들은 한정된 지면 때문에 짧은 문구로 함축되어 있어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선언적 구호로 가득찬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정당간에 별로 차별성이 없는 정책 또는 공약만으로는 환경문제에 관심있는 유권자나 환경단체회원들의 올바른 판단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환경문제에 관한 후보자 설문조사 또는 정당별 공개질의서를 통해서 환경후보가 좀더 많이 당선되고 또 환경문제해결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환경후보를 선출하고 환경정당을 선택하는 일은 이번 선거에서 민간 환경운동에 부여된 중요한 과제의 하나다. **민**